



축산폐수처리 6,900개소 지원키로 농가당 300만원씩

정부는 '91년도 축산폐수처리 지원사업중 법규제 이하 축산농가에 대한 간이정화시설 지원사업을 간이저장조 5,319개소, 톱밥발효돈사 1,125개소, 건조장(퇴비사) 456개소 등 총 6,900개소로 확정하였다.

농가당 300만원(보조 90만원, 융자 210만원)씩 지원되며, 법규제 이하 농가중 소 11두, 돼지 51두, 닭 5,000수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간이저장조는 낙농, 육우, 양돈농가에 대하여 저장액비화 방법을 적용하고, 톱밥발효돈사는 양돈농가에 대하여 적용하되 축산시험장 등에서 제시한 설치방법중 지역여건에 맞게 선택 적용한다.

또 건조장(퇴비사)은 양계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하되 가급적 1차 발효처리시설로 설치, 퇴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도별 요청물량이 초과한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 축산업 계속 영위 가능농가, 자담능력이 높은 농가순으로 선정한다. 시도별로 배정된 사업물량

은 다음과 같다.

(단위:개소)

구분	간이 저장조	톱밥 발효돈사	건조장 (퇴비사)	계
서울	-	-	-	-
부산	-	-	1	1
대구	2	-	-	2
인천	8	4	1	13
광주	25	1	15	41
대전	3	-	-	3
경기	796	29	34	859
강원	79	5	3	87
충북	411	23	24	458
충남	1,342	120	50	1,512
전북	819	140	190	1,149
전남	643	84	48	775
경북	637	519	-	1,156
경남	523	200	90	813
제주	31	-	-	31
계	5,319	1,125	456	6,900

축협 닭고기, 계란사주기운동 전개 생산자에게 사육수수 감축 호소



축협중양회는 폭락한 양계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지난 19일 잠실 롯데월드 앞을 비롯, 6개 지역에서 닭고기, 계란사주기 운동을 펼쳤다.

이번 소비축진 캠페인에서는 현장판매와 함께

달걀의 영양가치와 요리방법을 소개한 홍보책자 「완전식품 달걀」 10만부를 제작·배포했다. 또 7~8월중 축협 도지회와 회원조합에서 지역별로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캠페인에서 소비자들에게 배포한 「완전식품 달걀」은 달걀에 대한 잘못된 편견, 새롭게 발견된 달걀의 영양학적 우수성, 달걀을 이용한 5가지 요리, 달걀을 다루는 지혜 등을 다루었다.

한편 근본적인 가격안정 대책은 사육조절에 있어 축협은 양계농가에게 불황이 조기에 타개될 수 있도록 사육수수를 감축하도록 호소하였다.

물가안정대책 축산물 추가수입 농발기금, 축진기금을 수입운용자금으로 활용

정부는 하반기 물가안정대책 일환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우유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물량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수입기관도 조달청을 포함 다양화시키기로 했다.

쇠고기 수입물량을 당초 8만4천t에서 11만5천t으로 확대하고 쇠꼬리, 족 등 5백t을 수입키로 했다. 또 수입쇠고기 전문점도 2천5백개소에서 연말까지 3천5백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돼지고기는 당초 8천t 보다 1만2천t을 늘린 2만t을 도입키로 하고, 분유도 당초 8천t에서 7천t을 늘려 1만5천t을 수입키로 하였다.

특히 구조적으로 국내 공급이 부족한 농축산물은 수입비축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축협, 유통공사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비축기관에 조달청 등 공공기관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또 이들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농발기금 1천70억원, 축진기금 6백30억원, 조달기금 1백억원을 연계, 운용하기로 했다.

민자당 농정설명회 개최 농어민단체 대표 초청

민자당은 지난 12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농·수·축협 등 전국 농어민단체 대표 등 관계자 1천여명을 초청, 농정설명회를 가졌다.

민자당 정책위원회 나옹배 의장은 「농어촌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기본구상」과 이에 따른 당차원의 중장기대책을 설명하였다. 또 정창화 국회 농림수산위원장은 국회차원에서의 농어촌관련법률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영삼 대표최고위원, 장경우 사무부총장을 비롯, 농어촌 출신 민자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였다.

농지소유 상한선 20ha까지 확대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에 적용

농림수산부는 현재 3ha인 농지소유 상한선을 농업진흥지역안에서는 20ha(6만평)까지 확대하고, 또 기계영농으로 경작능력이 20ha를 초과할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소유상한 확대방안을 마련하였다.

진흥지역밖의 농지는 현행과 같이 3ha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또 농지의 영세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농지를 직접 농사짓는 한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농가에 증여 또는 양도할 경우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면제키로 하였다. 상속세나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상속, 증여 받은 농민이 10년내에 영농을 포기할 때는 관련세금 전액을, 20년내에 포기할 때는 50%를 추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비농민의 농지소유확대를 막기 위해 진흥지역안의 농민에 대해서만 상한선까지 확대소유하는 것을 인정키로 하고 소유상한을 여기거나 자영농민으로 위장, 농지소유를 확대하는 사람은 처벌토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농협 농민단체 관련인사 초청간담회 개최 농민단체의 활동방향 모색

농협중앙회는 지난 11일 속초 농협연수원에서 농민단체 대표들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본회를 비롯 낙농육우협회, 기독교농민회, 포도회, 정동회 등 농민단체 대표 20여명이 참석, 농민단체의 바람직한 활동방향 모색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앞서 농협대학 이재등 교수가 "일본 농민단체의 활동현황", 농경련 정명채 실장이 "유럽 농민단체의 활동현황", 단국대 장원석 교수가 "한국 농민단체의 활동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미약한 농민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하고, 한국 농민과 농업을 살리기 위해 각 농민단체가 연계하여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도 농업관련행정조직 개편 농림수산물·농어촌개발국으로

정부는 도(道)농업관련 행정조직을 대폭 개편키로 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과 농어촌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증산위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조직을 개편하게 된다.

개편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의하면 농림국은 농어촌개발국으로, 식산국은 농림수산물국으로 명칭이 바뀌고 농림수산물국장에 농림직 공무원의 임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농어촌개발국에는 농산물유통과, 농어촌개발과, 기반조성과, 양정과를 두고, 농림수산물국에는 산림과, 농산과, 축산과, 수산과 등 4개과씩을 두도록 했다.

수입자유화로 피해가 큰 품목 보상키로 6개 품목 260억원

정부는 92~94년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에 포함된 품목중 농가의 직접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호프는 차액보상, 배, 복숭아, 단감은 폐원보상, 유자와 매실은 작목전환자금을 용자 지원키로 하였다.

94년 개방품목인 호프는 수매업체와 계약재배를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96년까지 국내 수매값과 국제가격의 차액 전액이 지원된다. 유자와 매실은 재래품종 재배농가나 생산성이 낮은 지역의 농가중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희망하면 1ha당 1천만원의 작목전환자금이 용자된다. 또 배 폐원보상금 지급 대상 농가는 0.05~1ha 영세농으로 3년간 기대소득인 0.1ha당 250만원, 복숭아 농가는 0.05~0.1ha 농가중 0.1ha당 150만원, 단감농가는 0.1ha당 2백만원의 폐원보상금이 지급된다.

(주)하림 도계가공공장 완공 최근 육계가격 상승에 큰 역할

(주)하림(대표 김홍국)은 1일 12만수의 육계를 처리할 수 있는 특급도계장 및 가공공장을 부지 1만평, 건평 5천평 규모로 전북 익산군 망성면에 건립하였다.

그동안 육계계열화사업을 전개, 각종 중간자재의 직접 생산을 통해 생산비 절감에 주력하는 한편 품질향상을 위해 이번에 위생시설을 갖춘 특급도계장을 완공,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현재 200여개의 계약농가를 앞으로는 3백여 농가로 확대하면서 9월부터는 닭고기를 일본에 수출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어온 육계가격이 하림 도계장의 가동으로 가격상승이 이루어져 계열주체로서의 역할을 한몫해낸 셈이어서 향후 육계산업발전의 전인차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